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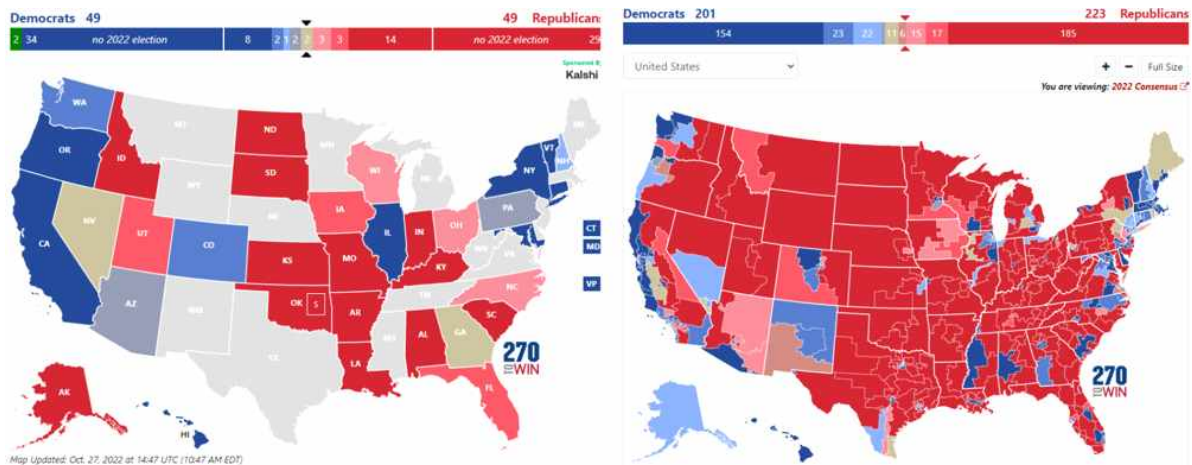
미 양당 중간선거 공약 주요내용 및 선거 결과 전망

- ◆ 민주당 상원, 공화당 하원으로 구성된 분할 의회 전망 우세
- ◆ 분할 의회 시 정책 교착 상태 돌입, 대통령의 행정명령 의존도 증대
- ◆ 경제 현안은 외부 요인이 커, 선거 이후 개선·변화 기대 낮음

I. 미국 중간선거 동향

- 美 중간선거(11.8)를 앞두고, 주요 언론은 연일 선거 결과 전망 발표 중
 - 상원 선거는 초박빙인 가운데, 하원 선거는 공화당 승리가 유력(10.28)
 - 선거 분석 언론 '270toWin'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민주당이 상원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카멀라 해리스(Kamala Harris) 부통령의 상원 투표 권한으로 민주당이 과반(51 대 50)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
 - 현재 117회 하원 구성은 총 435석 중 민주당 220석, 공화당 212석, 무소속 3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선거 이후 하원은 민주당 201석, 공화당 223석, 무소속 11석으로 공화당의 우세 유력

<2022년 상·하원 중간선거 예상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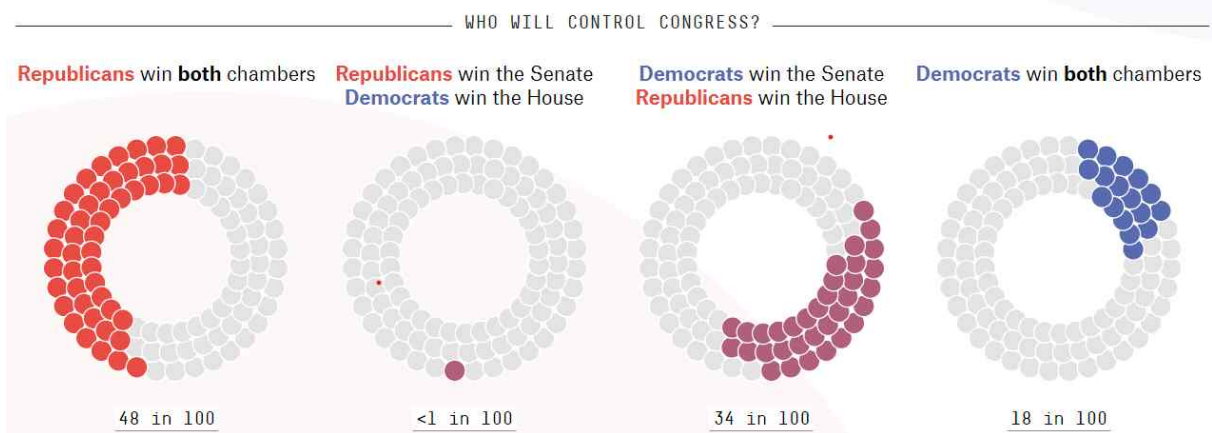
(주 : 10.27 기준, 좌:상원 우:하원)

[자료 : '270toWin']

○ 유권자들의 중간선거 결과 예상

- 'FiveThirtyEight'은 미국 내 사회 문제 대두로 인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, 경제 둔화와 10월부터 거론되었던 '정권 심판론'에 힘입어 공화당의 약진을 예고

<중간선거 결과 예상 여론조사>



(주 : 10.24 기준, 여론은 공화당의 우세를 예상)

[자료 : 'FiveThirtyEight']

- 여론조사는 공화당이 상·하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40%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공화당의 승리를 전망 중이며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하는 시나리오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민주당의 중간선거 패배를 예측

□ 美 중간선거 최대 쟁점은 '경제'

- 주요 정책 여론조사 : 물가상승률(29%), 일자리·경제(15%), 총기사고(8%), 낙태법 논쟁(7%), 이민(6%), 기후·환경(6%) * 로이터 여론조사(10.17)
- 응답자 중 45%는 전년 대비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했으며, 공화당(42%)이 민주당(31%)보다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
- 낙태 합헌 취소 결정 이후 여론은 낙태에 긍정적인 민주당에 기울었으나, 많은 유권자가 민주당 경제정책을 불신하는 상황 속 경제 이슈가 부상하며, 공화당 강세 전망에 힘이 실리는 상황

II. 양당 주요 선거공약

- 공화당은 선거전략으로 미국에 대한 헌신(Commitment to America) 제시
 - 선거 승리 및 '24년 대선까지의 국정 운영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심판론으로 선거전략 수립
 - 선거전략의 주요 안건은 (1) 국내 경제 재건, (2) 안보와 치안 재건, (3) 미국인의 자유 수호, (4) 헌법을 통한 정부 권한 견제

<Commitment to America 안건별 주요 내용>

항목	주요 내용
국내 경제 재건	· 물가안정, 지출안정, 에너지 기업 투자 확대, 공급망 재건 · 제조업 확대, 중국 공급망과의 탈동조화, 경제 경쟁력 확대
안보와 치안 개선	· 미국-멕시코 국경 정비와 불법 이민·마약 유통 단속 강화 · 20만 명 이상의 경찰 추가 인력 총원 및 보너스 제공 · 중국 해군 증강 견제를 위한 하원 '중국 특별 위원회' 설치
미국인의 자유 수호	· 교육 및 국민 건강 증진과 대형 기술기업 견제 · (교육) 동성애, 낙태, 성전환 등 일부 이슈의 의무 교육 반대 · (보건) 민주당 국가 보험 제도 완화 및 선택권 존중 약속 · (기술) 페이스북, 트위터 등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사용 견제 및 온라인 서비스 내 정치적 또는 민감한 메시지 노출 관리
헌법을 통한 정부 견제	· 발언·종교의 자유, 총기 합법화 수호, 낙태 폐지 결정 유지 · 투표 시 신원조회 강화 및 부정 투표 방지 노력

[자료 : 공화당 홈페이지]

- 민주당은 집권당인 만큼 '20년 대선 정강정책(Party Platform) 유지
 - '20년 대선의 주요 공약을 차례로 달성* 중임을 강조하며, '24년 대선 전까지 민주당 주요 공약 달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지지층 집결 호소
 - * 사회·인프라 법안 통과, 코로나19 완화, 친환경 정책 수립, 국내 제조업 활성화 정책 등
 - 대선 선거전략인 만큼 미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총망라하지만, 러·우 분쟁,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위헌결정 등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견해는 누락*
 - *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후보들은 주로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를 통해 현안 견해를 공개 중

<Party Platform 안건별 주요 내용>

항목	주요 내용
통상정책	·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중지 및 미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· 미국 제조업 부흥 및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
경제정책	· 더 나은 재건(Build Back Better) 법안을 통한 시설·사회 인프라 구축 · 법인세 인상(21→28%)을 통한 세수 확보 및 정부 부채 완화
공중보건 및 기후변화	·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및 사회보장제도(Medicare) 강화 · 2050 Net-Zero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연구 개발 강화
이민 및 디지털	· 숙련 노동자와 STEM 인력 수급을 위한 비자 발급·이민제도 개혁 · 대형 IT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, 사이버 보안 문제점, 반경쟁 시장 관행 조사

[자료 : 민주당 홈페이지]

Ⅲ. 주요 현안별 양당 반응

□ 물가상승 완화 정책

- (민주당) 높은 물가상승률을 선거 악재로 인식,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해 노력
 - △ 연준의 물가상승률 완화 노력 지지, △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, △ 소비자금융보호국(CFPB)의 수수료 인하안 제시 등
 -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“물가상승률 악화 및 가계 비용 증가를 야기할 공화당의 5가지 계획” 성명 발표(10.27)
- ↳ 공화당 집권이 정부 부채를 향후 10년간 3조 달러 늘리고 사회보장제도 약화, 건강보험료 인상, 학자금 혜택 무효로 체감 물가를 인상할 것으로 주장
 - * 사회보장제도 내 약값의 2,000달러 상한선 및 인슐린 지원금 폐지, 건보료 800달러 인상
- (공화당) 대규모 정부 지출안 검토 및 축소 의지 시사
 - American Rescue Plan Act와 같은 민주당 주도의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물가상승률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예산 감축을 암시
- (현지 반응) 양당의 물가상승률 완화 정책에 회의적
 - 의회가 높은 물가상승률에 뚜렷한 도움을 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중간 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점을 지적 * 웰스파고 및 전문가 언론 기고
 - 선거 결과가 분할 의회일 경우, 미국 경기가 '23년 악화해도 공화당 하원의 반대로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* JP Morgan

□ 세제 정책

- (민주당) 대기업 대체 최저 법인세율 도입 이후에도 세수 확대 정책 추진 중
 - IRA로 대기업 최소 법인세(15%) 도입, 2023 예산안을 통한 법인세 인상(21→28%),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(37→39.6%), 억만장자 최소세(20%) 추진
 - * 국세청(IRS) 예산에 800억 달러 10년간 추가 투입(예산 66%↑ 효과) 추가 투입과 87,000명 신규 고용 정책 통과로 정부 징세 역량 강화
- (공화당)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 효력 연장 추진 및 글로벌 법인세 반대
 - 공화당 지도부는 3년 내 만료될 2017 공화당 세금 감면 정책의 영구화를 공약으로 추진했으며,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(15%) 도입을 반대 * NYT, Politico
- (현지 반응) 공화당 법인세 조정은 지지층 결집 및 거부권 유도 전략
 -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감세를 주장하는 목적은 세금 감면안에 대통령 거부권 사용을 유도해 다른 주요 입법 의제를 통과시키기 위함으로 분석 * WP

□ 친환경 정책

- (민주당)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% 감축 목표 추진
 - 트럼프 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및 국제협력 도모
 -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으로 태양열·원자력과 같은 저공해 에너지원 활용 강화와 전기차 구매 활성화를 위한 3,700억 달러 예산 지원
- (공화당) 에너지(석유·가스) 독립(Energy Independence)을 공약
 - 공화당 하원 에너지·통상(E&C) 위원회는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을 '급진적(rush to green)'으로 규정했으며, 지도부는 석유·가스 생산 패스트트랙 제정 필요성과 국내 파이프라인(Keystone) 가동 필요성 제기
 - * 6개 생산면허 발급으로 미국 천연가스 수출량을 25%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주장
- (현지 반응) 공화당 우세지역 내 청정에너지 산업 규모도 고려될 전망
 - '22년 8월 기준 공화당 우세지역의 청정에너지(태양광·풍력) 산업 규모는 민주당 우세지역보다 커, 많은 공화당 우세지역도 청정에너지 산업 지원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 * Politico

IV.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전망

□ 중간선거 이후 상·하원 변화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(자료 : S&P Global, JPM 종합)

○ 시나리오 #1 : 공화당 하원, 민주당 상원 승리

- * S&P Global은 1번 상황을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전망
- 공화당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을 위한 절차적·상징적 조치를 추진하며 양당 간 정책 교착 상태가 일어날 것이 거의 확정
- 재생 에너지 개발, 보육 및 노인 돌봄 확대와 같은 기후·사회 정책 제정 노력은 '24년 대선과 의회 선거 이후에야 결실을 볼 가능성이 큼
- 바이든 대통령은 IPEF 협상 타결, 탄소 배출량 감소, 물가상승 완화 노력 등의 행정부 우선순위를 행정명령에 의존하며 처리할 전망
- 이전 분할 의회 상황들을 고려할 경우, 부분적인 정부 폐쇄(shut down)나 정부 부채 한도를 두고 백악관과 의회가 대립할 가능성이 대폭 증가

○ 시나리오 #2 : 민주당 상·하원 모두 승리

-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내 사회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며, IRA에서 제외된 사회 조항 중 연방 학자금 대출 개혁, 보육 및 노인 돌봄과 관련된 추가 인프라 법안 의제의 통과 가능성 증대
- '24년 대선을 의식하여 민주당의 독자적인 정책은 행정부 차원에서 완화하려는 시도가 보일 수 있으며, 행정명령과 일반적인 규제 절차는 중간선거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

○ 시나리오 #3 : 공화당 상·하원 모두 승리

- 공화당은 높은 확률로 세금, 교육, 이민, 정부 지출에 관한 상징적인 법안을 통과하려 시도할 전망
- 다만, 상원에서 민주당 필리버스터를 극복할 60표를 얻는 과정에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며, 이를 우회해 예산 법안에 핵심 의제를 반영할 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 부분 폐쇄 가능성 고조

□ 의회 내 공화당 영향력 확대에 따른 무역 정책 전망

○ 대중무역 정책

- 양당의 초당적인 반도체 칩과 과학법 통과는 '중국 기술 굴기 견제'에 대한 양당 간 공감대를 방증하여, 의회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전망
- Michael McCaul 공화당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중간선거 이후 대중 LNG 수출통제안도 논의할 것으로 언급했으며, Mark Warner 민주당 상원의원도 중국 에너지 회사의 무역 블랙리스트 등재를 검토할 필요성 주장
- 중간선거 이후 국방수권법을 통해 대중 투자규제법인 국가핵심역량수호법(NCCDA)과 대만정책법 등 대중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가능성 존재

○ IPEF 등 美-다자간 무역협정

- Lowy Institute는 트럼프 시절 고립주의 당론이 공화당 내에서 우선시 될 것으로 전망하며, 보호무역이 촉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
- Chatham House는 공화당이 상·하원 과반을 확보할 경우, 세계에 미국 외교 정책 공약의 미래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'미국 우선주의' 대통령이 '24년 이후 백악관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경보를 울릴 것이라 평가

○ 일반특혜관세제도(GSP)

- 노동·환경을 강조한 민주당 법안보다 GSP를 폭넓게 인정하고 미제공분 소급을 요구하는 공화당 법안이 의회 논의 대상으로 채택될 가능성 증가
 - *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무역조정지원제도(TAA)와 무역협상권한(TPA) 갱신을 주장하며 대립 중
- 정치코는 공화당이 양원 중 한 곳에서 승리할 경우, 민주당이 오히려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일반특혜관세제도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

[자료원] 백악관 보도자료, 양당 홈페이지, ABC, Bloomberg, CNN, Insidetrade, The Hill, Politico, WSJ 및 KOTRA 워싱턴무역관 보유자료 / 끝